정치의 계절, 지역현안 목소리 커진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에 역사관 건립 공약화 촉구 행동 나서
나주, 부영골프장 공공기여 활성화 방안 요구 등 시민단체 적극 활동
선거 때만 되면 일부 시민단체 인사 캠프 직행에 곱지 않은 시선도

내고장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주에선 시민단체가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을 상대로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 공약화를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고, 전남에선 혁신도시를 품은 뒤 날로 위상이 커지는 나주에서 풀뿌리 시민단체 주도로 지방의원 의정 활동 평가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들이 일제강제동원(징용 등)의 아픔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보관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에 나서달라.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단체는 "광주·전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일항쟁 의지가 높았고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투쟁의 중심에 섰던 곳"이라며 "일본의 역사 날조 도발에 대응해 우리 지역이 가진 피해자 진술서, 빛바랜 일기, 활동사진과 영상 등 역사적 자료를 담을 역사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나주에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정치권을 향해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빛가람주민참여연대, 광주전남혁신도시열린플랫폼,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등 3개 시민단체는4일 10여 명의 나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나주 5대 현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단체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공공기여 활성화 방안 ▲혁신도시 악취 해소 방안 ▲나주시 부정부패 근절 방안 ▲ SRF(가연성폐기물연료) 발전소 문제 향후 대응 방안 등 5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 측은 "하나같이 지역사회를 달궜던 현안이지만 대다수 시장 후보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변별력을 찾기 어려웠다"며 "공개질의와 답변을 통해 유권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비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시민들의 행동"이라고 했다.

유권자들의 집합체 격인 시민사회가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왕성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하나로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지역사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시민단체가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관(官)을 견제하거나 내고장 일꾼을 뽑는 데 도움을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 시기마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선거캠프로 직행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마냥 곱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광주에선 수년간 시민단체 대표로 왕성하게 활동한 인물이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로 옮겨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제동원 소송자료·일기 등 수천점 보관 한계
"눈물의 역사 공유해 일본 역사 날조 대응해야"

광주에 역사관 건립 공약화 촉구 왜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들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한 투쟁의 중심지, 광주·전남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을 짓겠다고 약속해달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6·1지방선거에 나설 시장·지사 후보들에게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투쟁 역사에서 광주와 전남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미쓰비시 자동차 등 전범기업 불매운동 등 줄기찬 소송과 반일 운동을 주도한 이도 지역 활동가들이었고, 피해를 증언한 이도 광주와 전남에 터 잡고 살던 이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는 일제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이 적잖이 쌓여있다.

이날 시민모임 측은 고(故)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회장,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자 등 광주·전남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록물 수천 점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고인이 된 이 회장이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며 모아둔 소송기록과 일기, 편지,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이 광주·전남 피해자 1000여명을 모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른바 '천인소송' 자료도 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기록물을 현재 단체 사무실에 내버려 두다시피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료가치가 큰 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화재·습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역사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의 역사 날조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거짓 주장을 반박할 가장 유력한 방법은 피해자들의 경험과 증언, 그리고 기록물이라는 주장도 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2011년 전국에 걸쳐 1만7148명에 달했으나 올 1월 현재 1815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생존자는 각각 50명, 178명뿐이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귀중한 자료 수천점이 허름한 시민단체 사무실에 10년 가까이 쌓여있는 동안 국내 곳곳에서 기증 요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 지역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한과 눈물의 기록물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공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품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을 시장·지사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마개도 없이 고삐 풀린 사냥개…광주 도심서 사람까지 공격

4마리 난동에 소형견 참변
소형견 주인도 부상 당해

광주 도심에서 견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냥개 무리가 주변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소형견 주인까지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5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거리에서 A(53)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B(49)씨와 소형견(푸들)을 잇따라 공격했다. 당시 A씨는 개 5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으나, 이 중 4마리가 B씨의 개를 보고 갑작스레 달려들었다고 한다.

A씨의 사냥개들은 B씨의 푸들을 물어뜯은 데 이어, 이를 말리는 B씨의 손목과 손가락도 물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B씨의 개는 치료 중 죽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의 개 '하운드' 종은 사냥개로 분류되나 동물보호법에서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씌워야 하는 종은 아니다. 개에 입마개를 씌워야 하는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종이다. 경찰은 일단 동물보호법 위반은 없다고 보고, A씨를 과실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양판지 노조, 회사 직장폐쇄 맞서 해지 가처분소송

대양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노조가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해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폐쇄 해지 등 가처분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양판지 사측은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조합원에 대해 지난달 17일 야간근무조부터 공장 출입금지 등을 포함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대양판지지회는 사측과 2020년 2021년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이유로 진행된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해 7월 19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 17일부터 생산속도 등을 이유로 들어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말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노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노조측은 "사측이 선제적 직장폐쇄를 진행해 노조의 조직력 약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을 하고 있다"고 가처분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양판지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사측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점검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심했다 아차!…주의하세요

프로야구 시즌 주차 위반 단속

광주시 북구가 '2022 프로야구' 시즌 시작과 함께 경기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북구는 5~7일 경기부터 챔피언스필드 인근 교차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경기 시작 전·후 1시간으로 단속인력이 이동식(2대) 고정식(4대) 장비를 이용해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 지도 차량 1대를 정문에 배치해 통행 방해 차량 계도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 주정차 교통지도를 통해 경기 관람객과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북구는 올 시즌 홈경기(71경기)가 진행되는 9월 21일까지 교통 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상가와 가정 등을 방문해 소화기 판매를 강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광주시 북부소방에 따르면 최근 한달동안 4건의 판매 강요사건이 발생해 관련 문의와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방서 이름이 적힌 조끼를 일상복 위에 입은 사람이 소방점검을 나온 소방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소화기 교체 등을 이유로 소화기를 구매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도 추가 구매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온라인 상 2~3만원의 소화기를 3만5000원에 구매했다는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에 북부소방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공무원증 기입 소속기관·성명 확인 ▲점검 방문시 관련 공문서 확인 ▲관할소방서 문의 등의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공무원증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